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 융복합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활동 보고서

I. 연구활동 개요

- 사업대상 :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 융복합을 위한 연구모임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2020년 11월 (11개월)
- 사업내용
 - 과제발굴을 위한 워크숍, 토론회, 현장방문 등
 - 연구보고서 발간, 배포

II. 총 평

-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 정책의 현재와 사례 등 현황을 검토하고 연구모임 조사연구 방향 및 계획 논의
- 농촌형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방향과 정책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책융복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
- 향후 주민자치회 우수 지역 현장방문 및 현장토론회를 통하여 주민자치회와 농촌 정책간의 융복합을 통한 충남형 방식 도출

III. 추진 실적

발족식 및 제1차 회의

-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 정책의 현재와 사례 등 현황을 검토하고 연구모임 조사연구 방향 및 계획 논의

□ 개최 개요

- 일시 : 2020. 4.29.(수) 14:00
- 장소 : 충청남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108호)
- 대상 : 연구모임 회원(대표 김명숙 의원 등 19명)
- 주제
 -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현황과 시사점
 - 연구모임 일정 및 현장견학 등 향후 조사연구 방향과 계획 논의

□ 주요내용

- 충남형 주민자치회 현황과 시사점
 - 충남 읍면동과 주민자치회 현황
 - 충남형 주민자치회 추진경과
 - 충남형 주민자치회 특징과 시사점
 - 최근 자치분권 동향

□ 종합평가

- 충남도의 주민자치회 현황과 추진경과를 알아보고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특징과 이에대한 시사점을 알아보고 향후
연구모임의 조사연구 방향과 계획 논의

토론회 개최

- 농촌형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방향과 정책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책융복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

□ 개최 개요

- 일시 : 2020. 6. 8.(월) 14:00 ~ 16:30
- 장소 : 청양복지타운 B동 1층 강당
- 대상 : 좌장 김명숙 의원, 발제 하경환, 안호, 송운섭
토론 김종수, 이병도, 정창득, 농승복, 노계향 등 60명
- 주제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 고도화를 위한 정책

□ 주요내용

- 2020년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방향(주제발표1)
발제: 안 호(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 개편추진단 과장)
- 자치와 협동의 지역공동체 안남면 사례 발표자료(주제발표2)
발제: 송운섭(옥천군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 새로운 공공성-주민자치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주제발표3)
발제: 하경환(충청남도 자치행적국 자치행정과장)
-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 종합평가

- 주민자치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고 타 지역공동체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에서 활동하는 주민, 공무원, 단체 등 한자리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 청취

IV. 기타

- 연구모임 현장방문 및 제3차 회의 개최는 코로나19로인하여 취소

농촌마을정책의 고도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제안¹⁾

구자인 센터장(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1. 농촌 마을만들기의 성격과 관련 정책 융복합(협업)

1) 마을만들기의 역사와 정책 융복합

□ 마을만들기 : 지방자치와 함께 성장한 주민자치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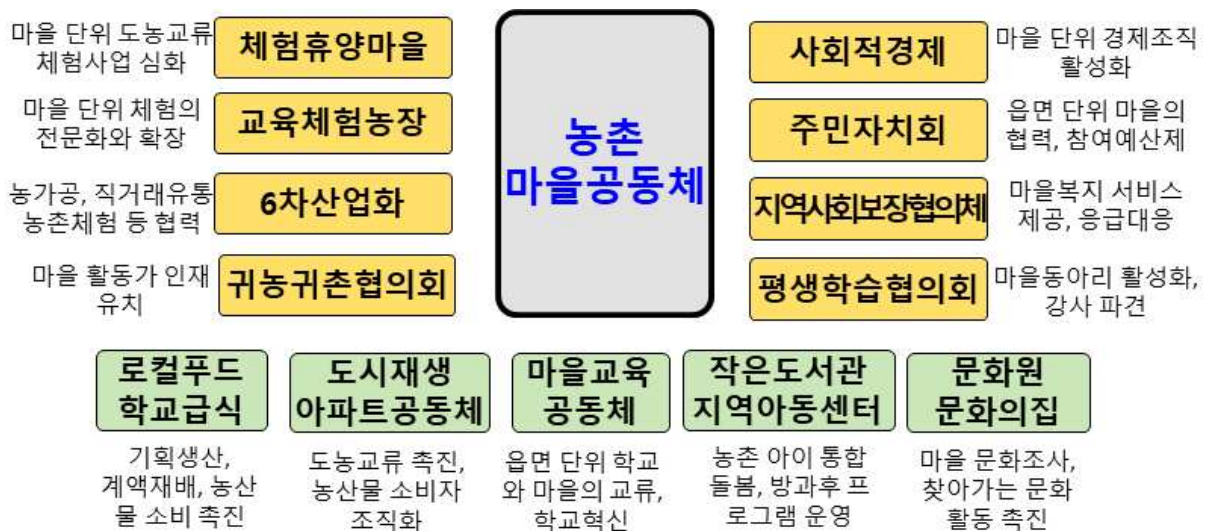
-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의 진전과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의 발달로 주민들이 개인으로서, 또 조직 형태로 지역사회의 주체로 등장함
 - 1980년대까지의 거대 담론 운동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의 생활세계를 방어하고 발전시키려는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주목함
 - 국가(행정)와 시장경제가 해결하지 못한 영역을 주민 스스로 삶의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주민자치운동으로 성장함. 예) 공동육아, 작은도서관, 대안학교, 생산자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등
- 하지만 지방자치가 발달하지 못하고 주민자치 역량이 성숙하지 못한 한국 농촌사회에서 마을만들기는 2000년대 들어와 체험휴양마을 사업을 계기로 등장하여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현재에 이름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도시와 농촌의 직접적 교류(그린투어리즘)’가 크게 강조되었는데, ‘농외 소득향상’과 이를 위한 대도시 소비자를 유치하는 경쟁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 정부의 농촌개발 정책도 ‘주민 주도, 상향식’을 강조하였지만, 마을리더의 지나친 희생과 봉사, 외부 컨설팅기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작용이 드러남

1)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매년 시군 지자체 대상으로 ‘농촌마을정책의 민관협치형 시스템 구축’ 컨설팅(연구용역)을 추진중임. 본 자료는 올해 6년차 마지막으로 수행한 서산시와 당진시 보고서의 일부를 요약한 것으로 이번 의정토론회의 주제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공동학습 자료에 해당함

□ 우리 모두가 꿈꾸는 지역사회 모델 : ‘풀뿌리 공동체(지역사회) 형성’

- 마을만들기는 역사적으로 ‘한 사람의 열 걸음’ 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강조하며 주민 모두가 같은 꿈을 꾸는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원칙을 중시함
- 일부 주민자치운동은 국가 정책으로 수렴되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고, 더불어 새로운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치운동이 등장
- 결국 농촌 마을만들기(공동체)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평생학습, 지역복지 등은 모두 지역사회(공동체) 발전을 위해 유사한 지향점을 가진 ‘한 뿌리에서 나온 다른 운동’에 해당함.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서로의 목적 달성도 가능함([그림 1] 참고)

[그림 7] 농촌 마을공동체와 관련 정책 영역과 협력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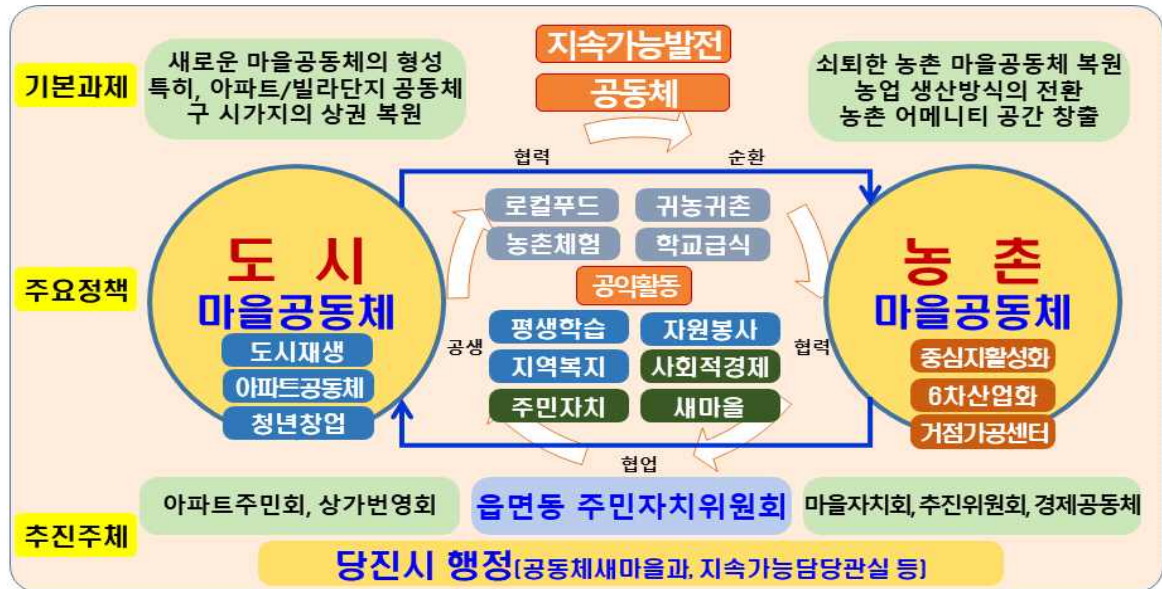


2) 모든 지자체는 도농통합형 : 도농순환형 정책 융복합

- 기초자치단체 규모가 큰 한국에서는 모든 지자체가 도농통합형에 해당함. 이에 농촌마을과 도심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성과가 내부에서 순환되고 축적되며 확장될 수 있도록 도농순환형 정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여기에는 다양한 정책 영역이 결합되어 있고([그림 2] 참고), 기본적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매개로 농촌형 마을만들기와 도시형 마을만들기가 강력하게 결합하는 방향으로 정책 융복합을 강화해야 함

-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도농순환형 마을공동체 복원에 이바지하고 마을 단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내발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임

[그림 8] 도농순환형 마을만들기와 관련 분야간 상호협력 관계 개념도(당진시)



3) 관련 정책의 연계·협력1 : 농촌 마을만들기와 읍면 주민자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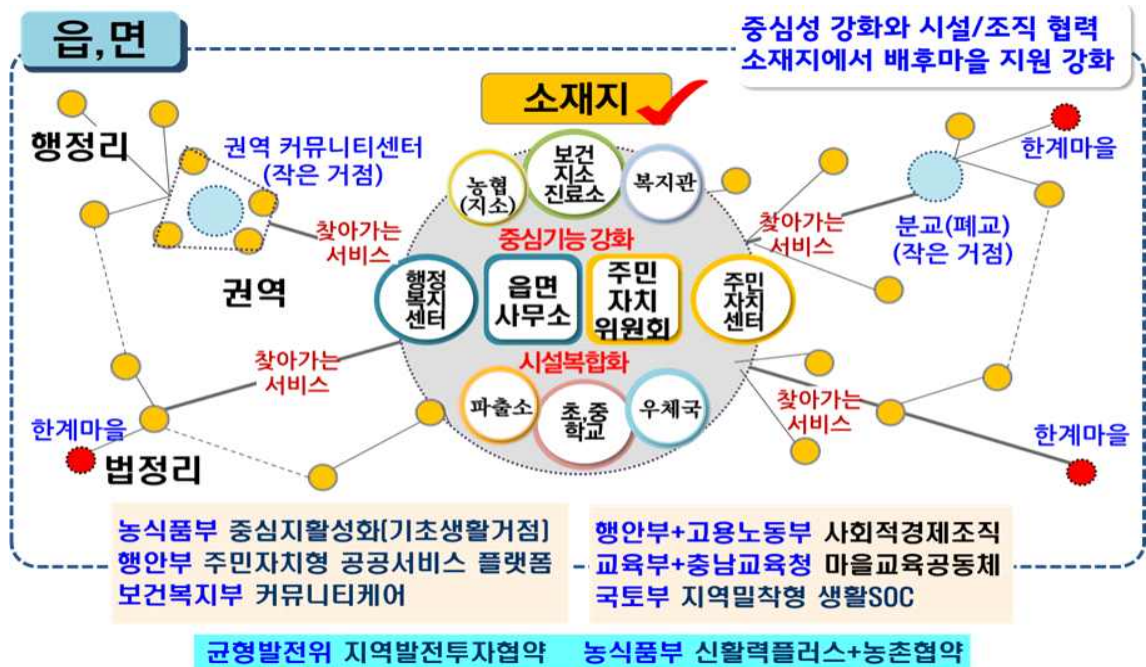
□ 주민자치회 전환과 정책 융복합

- 정부의 각종 정책은 부처별·사업별로 추진주체를 구성하여 진행되어 왔으나 이는 지역 내 한정된 소수의 지역리더를 놓고 주민조직 내 칸막이를 형성하는 방식이었음. 앞으로는 주민과 지역의 관점에서 주민자치회 전환을 통해 통합적 접근을 강조함
- 행안부 주도로 2018년부터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질적인 주민 대표 기구로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음. 충청남도도 시범사업을 시행중임
- 최근 시행되는 국도비 대형 공모사업이 동일 읍면에서 정책 칸막이를 통해 시행되면서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음. 공모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구역과 추진위원회, 사업내용 등을 조금씩 달리 하지만 본질적으로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함
- 정책사업이 시행되는 읍면 현장에서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 거의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음. 주민자치회가 주도하여 각각의 공공시설과 조직이 상호

협력하여 읍면 소재지의 중심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그림 3] 참고)

- 예를 들어, 농식품부 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과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생활밀착형 SOC) 사업은 하드웨어 성격이 강하고, 농촌 자치단체의 거의 모든 읍소재지에서 동시에 추진중임. 또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 교육부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프로그램 성격이 강한데 기본적으로 읍면 단위로 시행되는 특징이 있음. 또 거의 모든 사업이 추진주체로 사회적경제조직을 강조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음

[그림 9] 읍면 단위 정책사업의 융복합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전략



- 초고령화 시대에 정책 융복합을 통해 읍면소재지의 생활SOC시설을 복합화하고, 자치분권과 농촌협약에 적극 대응해야 함
- 읍면소재지의 다양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계하여 주민들의 이동거리를 줄여주고, 또 다양한 시설 및 조직 사이의 연계협력을 통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이를 통해 정책수요자인 주민의 필요에 맞추어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원스톱 제공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시설의 이용효율성도 향상될 것임.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시대에 시설복합화를 통해 주민 필요에 부응해야 함. 주민자치회 전환과 농촌협약 등의 정책이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런 방향임

□ 향후 전망: 주민자치회 역량의 성장과 병행하여 제도적 정비 강화

- 자치분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병행하여 시군 권한 중에서 주민 생활에 밀착된 권한은 읍면으로 단계적 이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초고령화 문제와 연계하여 보건복지 분야의 권한과 사무가 지속적으로 이양될 것으로 예상됨
- 농촌 읍면 단위의 주민자치회 권한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으로써 주민자치회 산하에 상근 사무국이 구성되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 전국 농촌 지자체에도 ‘읍면장 주민추천제’로 능력있는 공무원이 발령받거나 개방형 직위제로 민간 전문가가 채용되는 사례도 늘어날 것임
 - 충남도는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사업을 통해 당진시 신평면과 공주시 00동을 개방형직위로 공모하여 주민심사를 통해 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하였음

4) 관련 정책의 연계·협력2 : 농촌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 농촌 마을 기반의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방향

- 마을만들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도 ‘민관협치의 정책 시스템’이 구축되고,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정책적인 효과 도출이 가능함
 - 농촌 마을마다 여건이 다르기에 주민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성장과정을 밀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은 외부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성공가능성이 높음
- 마을 내부에서 현장포럼이나 희망마을 선행사업 등을 통해 경제공동체의 조직화를 시도하고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는 별도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전략을 선택함
 - 다만, 마을 현장과 분리되어 지나치게 시장경제를 지향하거나 규모화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하고, 가까운 지역사회(읍면, 당진시) 내에서 대면적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전략(관계망 시장 확보)이 보다 유리함
- 마을에서 공동소득 창출이 가능한 영역으로는 아래와 같은 분야를 생각할 수 있음. 다만 아래 분야를 통합하는 마을기업에서 출발하여 시장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반드시 협동조합일 필요는 없고,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형태에서 출발할 수도 있음

- 농업생산 연계 : 농산물 공동생산, 특화작물 가공, 직거래 유통(특히 학교급식, 공공급식망 연결) 등을 담당하는 마을기업
- 도농교류 연계 : (전담자가 있다는 전제 하에) 특히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과 연계하여 도농교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식생활교육, 농촌숙박 등과 연계하는 마을기업
- 기타 분야 : 마을의 전통문화 자원을 연계하여 둘레길, 농촌유학, 캐릭터 상품, 공유사무실 제공, 장기체재형 숙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상상할 수 있음. 전국의 선진지 사례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배울 수 있을 것임
-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 유의하여 방향을 모색함
 - 마을 내부의 조직화가 우선되어야 함. 마을 공동사업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경제공동체를 조직하고 생활공동체와 상호협력할 수 있는 역할분담이 잘 되어야 함. 이런 마을조직도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협력관계가 구축될 때 마을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음
 - 농업생산 활동과 충분히 연계되어야 함. 기본적으로 농업생산 영역의 소득창출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를 기본으로 도농교류나 전통문화, 경관환경 등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마을기업의 소득 영역을 개척해나가야 함
 - 행정사업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음.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이 제시되어 있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마을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의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음. 다만 내부에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 예산을 지원받아 실패한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읍면 소재지와 연계한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및 육성 방향²⁾

-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농촌 읍면을 기반으로 하여 현장에 밀착하여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음. 농촌정책과 충분히 결합되지 못하여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지 못한 채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상황임
- 농촌문제가 심각한 곳에 주민 수요도 높고 정책사업도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읍면은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현실에서는 다양한 정보나 사업이 공유되지 못하고 정책 칸막이나 민간단체 협력체계 미흡, 중간지원조직 미설치 등 다양한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

2) 이하 내용은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20. 2.,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범계획 수립』 158~160쪽을 참고하여 요약 정리한 것임

음

- 이에 자연발생적으로 읍면 단위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출현하거나 당사자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정공모 방식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음
 - 지정공모 방식을 시도해볼 수 있는 분야로 [표 1]과 같이 4대 영역을 제안할 수 있음. 각각은 농촌의 당면과제로 문제가 심각하고 시급한 정책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음. 행정의 보조사업 집행방식을 바꾼다면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룬 사회적경제조직이 빠르게 등장하고 확대될 수 있음
 - 각 조직의 상근인력 규모는 1~3명 내외로 크지 않지만, 경제사업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주변에 반상근이나 비상근 형태로 결합할 수 있는 주민이 훨씬 많을 수 있고, 이것이 농촌 방식에 맞는 고용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또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직화를 시도하는 그룹의 특성이나 논의의 출발계기, 추진 경험, 성과 등에 따라 각 분야들이 서로 결합하거나 혹은 분리되면서 지역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음
- 읍면 현장밀착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의 4대 핵심(지정공모) 분야
 - 첫째, 농촌경관개선사업단. 도로변 예초 작업, 가로수 관리, 설치미술 작업, 마을 정원 시공 등 마을가꾸기 활동 전담. 경험을 축적하여 경관계획 수립이나 컨설팅도 가능. 농식품부 농업환경프로그램사업, 공익형직불제 정책과 결합하여 성과 확대
 - 둘째, 빈집수리사업단+주거복지센터. 빈집 수리와 관리, 임대사업 담당. 독거노인이나 사회적약자의 주거복지 지원 활동 등 담당. 시군 자활복지센터(집수리사업단)나 주거복지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성과 확대
 - 셋째, 로컬푸드사업단. 소규모 농산물의 안정된 수집과 집하 및 유통, 못난이(B급) 농산물의 가공 등 담당. 마을 단위 생산자 조직화(기획생산과 계약재배) 교육,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공동급식 및 반찬나눔 등과 연계. 학교급식 및 푸드플랜 정책과 연계하여 1읍면 1조직 관점에서 추진하면서 성과 확대
 - 넷째, 노인요양원+주간보호센터. 행정리 마을 중심으로 거동이 가능한 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 면소재지 적절한 곳에 노인요양원 설립 운영 등. 읍면 내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 주민 중심의 학습모임에서 출발하여 실태조사 추진, 법인 설립 준비모임으로 전환. 1~2년의 중장기 현장실습(특히 법인 경영관리) 등의 절차를 거쳐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복지법인 설립. 최소

한 10명 정도의 일자리 확보 가능

[표 3] 읍면 현장밀착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의 4대 핵심 분야

구분	분야	주요 내용	일자리 규모	비고
①	농촌경관개선 사업단	·계획 수립, 교육·컨설팅, 시공 등 ·도로변 예초, 마을정원 시공, 가로수 관리, 설치미술 작업 등	·최소 2~3명	·노인일자리, 농업환경프로그램, 공익형 직불제 등과 연계
②	빈집수리사업 단+주거복지 센터	·계획 수립, 교육·컨설팅, 시공 등 ·빈집 수리 및 임대, 주거관리, 주거/에너지복지 서비스 제공 등	·최소 3~4명	·자활복지센터(집수리사업단), 주거복지센터 등과 협력
③	로컬푸드사업 단 (먹거리복지 센터)	·계획 수립, 교육·컨설팅, 판매 등 ·마을 생산자 조직화, 농산물 기획 생산(계약재배) 지도 ·지역농산물 공동급식, 반찬나눔 ·지역 농산물 유통, 판매 등	·최소 5명이 상 (지역 농업 규모 반영)	·지역 식당, 학교(공공)급식망, 로컬푸드 직매장, 거점가공센터 등과 연계
④	노인복지법인	·조사분석, 계획 수립, 위탁교육, 컨설팅·자문 등 ·주간보호센터/요양원 운영,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등	·최소 5명이 상	·법인 설립 중시 ·영광군 여민동락공동체 사례 참고

주: 일자리 규모는 최소로 추정된 것이고, 여기에 반상근, 비상근 일자리가 다수 결합될 수 있음
자료 :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20. 2., 15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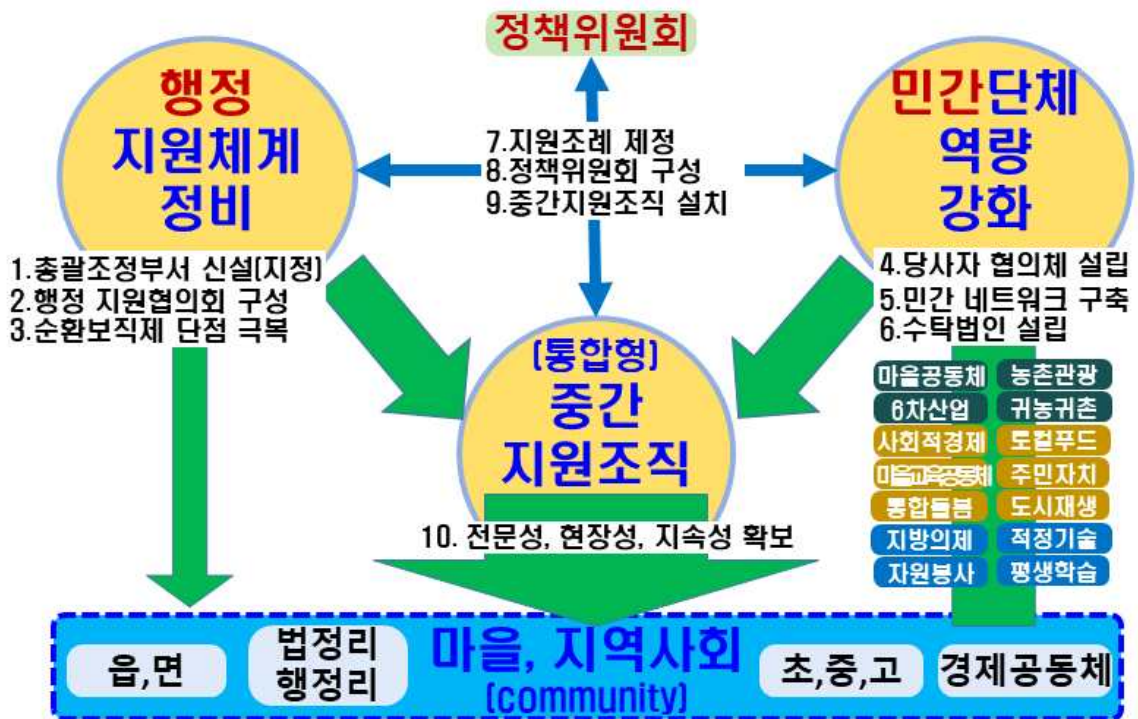
2. 충남 농촌 마을만들기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향후 방향

1) 충남농촌마을정책의 성과와 현재

□ 민선5기, 3농혁신과 농촌 마을만들기

- 충남은 민선5기(2010.6~2014.6) 출범부터 3농혁신을 도정 제1과제로 농업과 농촌, 농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
- 농촌 마을은 3농혁신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는 관점에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하고, 마을 단위의 발전계획을 주민 스스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

[그림 10] 민선6기, 농촌마을정책의 민관협치형 시스템 구축 개념도



□ 민선6기, 농촌마을정책의 민관협치형 시스템 구축 활동

- 민선6기에 들어와 기존의 희망마을 사업을 반성하며 ‘주민 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가 체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을 밖의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 구축에 집중함([그림 4] 참고)
- 핵심은 ① 행정의 지원체계 정비, ② 민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법인화, ③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와 운영에 두고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방식으

로 연차별로 추진함

- 광역의 ‘정책적 유도’를 통해 시군 자치단체 단위로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는 ‘민관협치의 농촌마을정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판단함
- 이러한 제도적 정비를 기반으로 읍면 단위의 주민자치회 전환과 행정리 마을 단위의 마을자치회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함

□ 민선7기, 농촌마을정책의 평가와 반성

- 민선7기에 들어와서는 농촌마을정책의 제도적 정비에 집중하여 마을 주민들의 실생활에 와닿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 ‘주민 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을 내부의 시스템 정비가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임
- 이에 민선6시까지 구축해온 ‘민관협치의 정책 시스템’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더욱 필요한 ‘마을자치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함
- 특히 주민학습용 계간지로 발간되는 『마을독본』과 월1회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을 강력하게 연계하여 ‘마을자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학습과 토론, 합의 과정을 계속 진행함

□ 2020년 12월 현재, 시군의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 구축’ 추진상황

- ① 행정의 지원체계 정비 : 행정의 조직개편을 통해 6개 시군에서 공동체 전담 ‘과’를 신설하고, 부서간의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하며, 공무원 순환보직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도입함
- ② 민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법인화 : 당사자 협의체로 마을만들기협의회가 10개 시군에서 설립되어 활동중이고, 2020년 10월에는 광역 협의회도 발족함. 또 사회적경제와 주민자치, 마을교육공동체 등의 영역과 협력하여 6개 시군에서 네트워크 법인이 설립됨
- ③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와 운영 : 15개 시군 모두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14개 시군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설치·운영중임. 광역을 포함하여 농촌 마을만들기 영역에서 약 80명이 상근하고 있고, 향후 역량강화전담기구 지정이나 신활력플러스사업, 농촌협역 등과 연계하여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표 2] 참고)

- 민간위탁 센터(5개) : 천안, 홍성, 예산, 보령, 금산
- 재단법인 센터(3개) : 청양(2020.7), 부여(2020.11), 서천(2020.12)
- 행정직영 센터(6개) : 아산, 논산, 태안, 서산, 공주, 당진

[표 4] 충남 시군 마을만들기(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현황(2020.11월 현재)

시·군	센 터 명	개소일	설치유형	사업영역	센터장	상근인력	사무실	민간네트워크
아산시	공동체 지원센터	2015. 7	행정직영	농촌마을+ 사·경	-	4명	어울림경제센터	아산시공동체 네트워크
논산시	(자치 새마을팀)	2015.10	행정직영 (공무직)	농촌마을	-	2명	논산시청	-
예산군	행복마을 지원센터	2015.11	민간위탁	농촌마을+ 신활력	반상근	7명(中사업단2 명)	예산읍 을지빌딩2층	(사)예산군행복마을네 트워크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16. 3	민간위탁	농촌마을+ 행복생활권	비상근	8명(中사업단3 명)	농업인다목적 회관	(사)만세보령공동체 네트워크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2016. 8	민간위탁	농촌마을+ 신활력	상근	9명(中지원사 업3명)	도시창조두드림센 터	(사)천안시공동체 네트워크 함께이룸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16.12	민간위탁	농촌마을+ 도시재생+ 마을조사단	비상근	11명 (中법인5명)	청운대학교 수신관 407호	(사)홍성지역협력 네트워크
서천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17. 1	민간위탁	농촌마을	비상근	4명	길산내우리터 1층	(사)서천마을누리 네트워크
청양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2017. 4	재단법인	농촌마을 (+확장중)	상근	5명	청양읍 (구)자원봉사센터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태안군	농어촌마을 지원센터	2017.11	행정직영	농어촌마을	-	3명	태안군청	-
금산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18. 8	민간위탁	농촌마을+ 신활력	상근	9명 (中신활력팀3 명)	금산시네마 2층	풀뿌리주민네트워크 (사)금산&사람들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19. 6	행정직영	농촌마을	-	2명	서산시민센터 2층	-
공주시	공동체종합 지원센터	2019. 7	행정직영	농촌마을+ 사·경	-	4명	공주시청 별관	(사)마을공동체네트워 크
부여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19.10	재단법인	농촌마을	-	3명	부여상권활성화 재단	부여군 지역활성화재단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20. 6	행정직영	농촌마을	-	3명	도시재생지원센 터3층	(추진중)

2) 충남농촌마을정책의 향후 방향

□ 기본방향1 : 행정리 마을자치와 읍면동 주민자치와의 협력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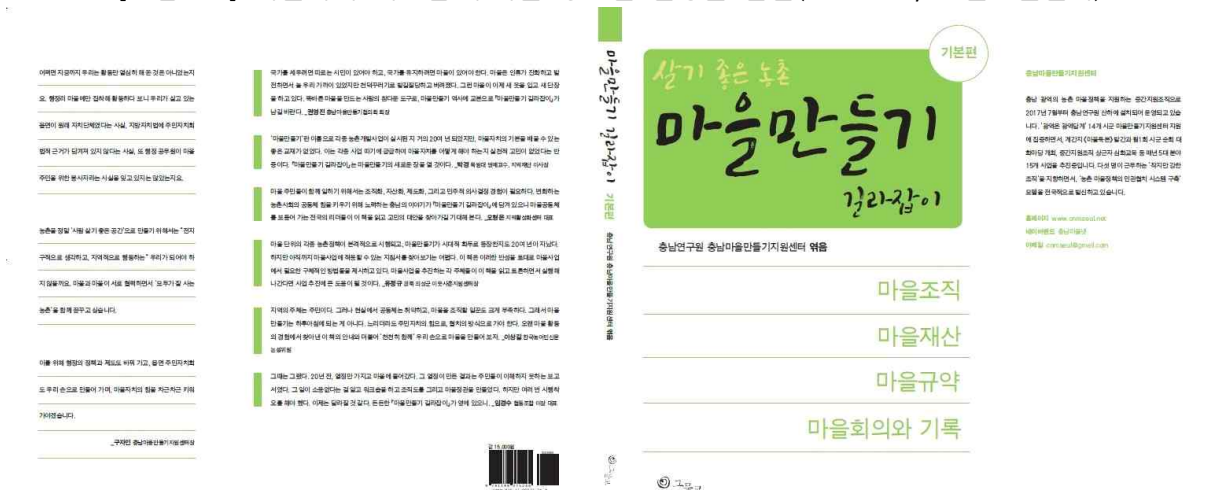
• 기본인식 : 대면적 정책 결정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 규모 문제’ 극복

-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의 규모(면적, 인구)가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매우 크고, 이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마을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권인 읍면 단위로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마을만들기의 민간 주도성을 강화하며, 관련 정책의 융복합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함

• 행정리 단위 마을자치 시스템 구축

- 충남에서는 민선6기부터 행정이 지원하는 마을 사업 자체보다 주민 스스로 마을을 자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과 기초’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함. 이런 차원에서 『마을독본』 통권 1~4호의 특집주제로 주민조직도, 공동재산관리, 마을자치규약, 마을회의와 기록을 선정하여 학습자료로 적극 활용함. 또 2018년부터 월1회 시군을 순회하면서 쟁점토론을 진행하는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에서 이 주제를 다룸
- 시군에서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 주도하여 마을대학의 교육 주제로 삼아 진행하기도 하고, 마을을 순회하면서 농촌현장포럼에서 적용하기도 하며, 또 자체 대화마당의 주제로 활용하기도 함

[그림 11] 마을자치 시스템 구축을 강조한 단행본 발간(2020.12, 그물코출판사)



- 2020년 12월에는 『마을독본』 통권 1~4호의 특집주제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길라잡이 기본편』(그물코출판사)이란 단행본을 발간함. 향후 이 단행본을 학습 교재로 시군마다 학습동아리를 조직하고, 쟁점토론을 거치면서 각 마을 실정에 맞는 마을자치규약 제정 운동을 전개할 예정임. 마을자치규약은 주민들의 합의로 만든 마을만들기의 ‘꽃’ 이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함. 또 마을발전을 위한 출발점이자 디딤돌이며 마을자치의 핵심장치이기도 함([그림 5] 참고)

•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과 적극 연계하여 행정리 마을자치 강화

- 읍면 주민자치회 주도로 ① ‘읍면 발전계획’ 수립과 ② ‘주민총회’ 의결, ③ ‘주민참여예산제’ 활용 등의 경험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옴. 중앙정부 정책 동향에 강력하게 결합하여 제도 개선과 선진적 실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이 과정에서 ① 행정리 마을에서 주민 스스로 상부상조를 통해 자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 ② 마을이 서로 협력하여 읍면 단위에서 주민자치회를 통해 해결해야 할 일, ③ 행정의 지원을 통해 공공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 등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접근함. 특히 읍면동마다 주민자치회 상근 기능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분과를 설치하여 행정리와 소통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중장기 방향 : 민관협치, 읍면 주민자치, 행정리 마을자치의 구분과 조화

- 한국 지방자치 현실을 반영하여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민관협치의 정책 시스템 구축’을 우선하여 출발하고, 읍면 주민자치회 성과를 축적하면서 행정리 마을자치회로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함([그림 6] 참고)
- 농촌마을정책은 민관협치의 제도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읍면 단위 주민자치회 전환과 연계하고, 행정리 단위 마을자치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고,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지나치게 큰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농촌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
- 하향식의 제도적 정비와 상향식의 정책 제안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갖출 때 정책과 현장 사이의 괴리는 극복될 수 있음. 봉건적 유산이 많이 남아 있는 행정리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① 주민 스스로 해결할 일(마을자치), ② 마을과 마을이 협력하여 해결할 일(읍면 주민자치), ③ 제도 개선과 외부 지원을 통해 해결할 일(시군 민관협치)을 각각 구분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



[그림 12] 지자체 민관협치와 읍면 주민자치, 행정리 마을자치의 개념적 구분

- 향후 농촌지역도 행정리 단위 마을자치의 역량이 성숙되면서 ‘주민 주도, 상향식의 마을만들기’가 실현되고 읍면 단위 주민자치회 활동과 연계하고, 기초자치단체 전체의 민관협치 정책 시스템에 당사자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함
- 농식품부 신활력플러스와 농촌협약 등의 정책사업은 이런 과정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지렛대에 해당함. 지자체가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는 정책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 기본방향2: 마을 주민 당사자의 등장과 조직화 지원

- **기본인식 : ‘스스로 말하게 하라’ 는 당사자 운동성 중시**
 - 마을만들기는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는 생활운동이고,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으로서 등장함
 - ‘주민 주도’ 의 마을만들기가 전제가 되고 존중되어야 행정과의 역할분담도, ‘대등한 협력관계’ 도 가능함. 특히 마을과 마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공통의 과제를 인식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가능함.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성장하고 공동학습을 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제안하기 시작할 때 행정은 ‘행정의 역할’ 에 충실해질 수 있음. 일반 주민의 ‘민원’ 과 마을만들기 주민조직의 ‘정책 제안’ 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함

• 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 설립과 역량 강화

- 마을과 마을이 협력하여 농촌 마을이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들을 공동으로 해결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마을만들기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은 매우 중요함
- 2015년부터 3농대학, 충남대회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마을만들기의 당사자인 마을리더가 협의체를 설립하여 ‘주민 주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 2020년 12월 현재, 충남에는 10개 시군에서 마을만들기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고([표 3] 참고), 2020년 10월 15일에는 1년간의 실무준비 과정을 거쳐 충남마을만들기협의회도 설립함(약 400여 개 마을 참여)

[표 5] 충남 시군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 현황(2020.12. 기준)

시·군	명칭	회원마을수	창립일	회 장	광역협의회	비고
홍성	희망마을협의회	40	2013.03.11	조홍식		
보령	마을만들기협의회	22	2014.07.01	권영진	대표 회장	희망마을포럼에서 전환
논산	농촌마을만들기협의회	55	2017.01.17	김시환		희망마을포럼에서 전환
서천	마을만들기협의회	18	2017.04.11	하창호	감사	
예산	마을만들기협의회	60	2017.09.26.	신용균	사무국장	
천안	마을만들기협의회	45	2018.04.13	이성근		
청양	마을만들기협의회	45	2018.09.17	황준환		
아산	마을만들기협의회	26(명)	2019.12.09	유진돈	부회장	회원수에 개인 포함
공주	마을만들기협의회	32	2020.01.17	양근승		
부여	마을만들기협의회	44	2020.12.08	이민우		

* 창립일순으로 기재

• 충남 시군 단위 민간 네트워크 구축과 법인 설립 현황

- 2020년 12월 현재,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은 14개 시군이고, 이 중에서 네트워크 법인이 설립되어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시군은 5개임([표 4] 참고). 민간 네트워크 조직을 설립하지 못하고 중간지원조직이 지자체 출연의 재단법인으로 최종 정리된 곳은 청양군과 부여군

임. 서천군도 2020년 12월부터는 민간위탁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함

- 아산시: 민간 네트워크 조직으로 아산시공동체네트워크를 임의단체로 설립하였으나 활동가 개인이 결합되는 형태로 유지됨. 향후 마을만들기협의회와 협력하여 네트워크 법인 설립이 검토되고 있음. 공주시는 주로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활동가와 단체가 결합하여 연합체 형식의 (사)공주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를 설립함. 향후 마을만들기협의회와 역량 강화와 더불어 중간지원조직의 수탁이 가능한 네트워크 법인 설립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됨

[표 6] 충남 시군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법인 설립 현황(2020.11. 기준)

지역명	법인 명칭	설립년도	조직화 방식	비고
홍성군	(사)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2016. 4.	관련 협의체의 대의원 방식	‘홍성통’운영 경험 발전
천안시	(사)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	2016. 5.	리더 개인과 전문가 주도	협의체 미발달 지역
보령시	(사)만세보령공동체네트워크	2016.12.	마을만들기협의회 주도 + 전문가 보완	일반 모델
예산군	(사)예산군행복마을네트워크	2017.11.	마을대학 5회로 협의체 조직화 + 네트워크	마을대학 육성 모델
서천군	(사)서천마을누리네트워크	2019. 4.	마을만들기협의회 주도 + 지속협 연계	일반 모델
금산군	풀뿌리주민네트워크 (사)금산&사람들	2020. 1.	지원센터 주도 + 분야별 개인, 조직 결합	지원센터 주도형

• 중장기 방향 : 농촌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농촌 마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과 농촌관광, 6차산업, 귀농귀촌, 푸드플랜 등의 정책과도 협력해야 하고, 또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마을교육공동체, 청년정책 등과의 협력도 필요함
- 각 정책 영역마다 당사자협의체가 구성되고 서로 협력하는 네트워크 조직이 설립될 때 민간 주도성이 강화되고, 칸막이를 넘어 설립목적 실현도 가능하며, 행정과의 대등한 협력관계도 구축 가능함. 또 네트워크 조직이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발전될 때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수탁자 자격이 주어지고, 민관협치(거버넌스)의 정책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구축되며, 연차적으로 경험 축적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융복합도 가능함

□ 기본방향3: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와 민간독립

• **기본인식 : ‘광역은 전문화, 기초는 통합화’ 원칙으로 추진**

- 중간지원조직 자체는 예산 측면에서 상근자 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워 규모화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광역자치단체는 전문화를 추진하되, 정책 칸막이를 넘어 협업을 제도적으로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
- 시군 차원에서는 통합형 설치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통합할 정책 범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동향과 당진시의 특수성(시정방향, 행정조직, 민간역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공동체 관점과 농촌정책 관점의 두 측면에서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 방향을 검토할 수 있음. 각각은 장단점이 있으며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과 같이 모두를 통합하는 방향도 가능함. 향후 농촌협약과 연계하여 농촌 마을만들기와 각종 농업농촌정책, 지역정책 등을 융복합할 수 있도록 방향으로 통합 방향도 검토해야 할 것임

•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3대 조건 중시**

- ① **행정의 조직개편과 업무 조정** : 통합을 희망하는 중간지원조직 담당 부서를 하나의 ‘과’로 통합하고, 통합형 기본조례 제정이 필요함. 현재의 공동체 영역 이외도 이런 전제 하에 조직개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함
- ② **당사자협의체 설립과 역량 강화** : 통합할 정책 영역마다의 민간 당사자협의체가 구성되고 역량이 강화되어 당사자의 목소리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이 필요함
- ③ **민간 네트워크 구축과 법인 설립** : 민간의 당사자 협의체들이 협력하는 네트워크 법인이 설립되고 의사결정과정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함.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기본재산 형성과 이사회 구성 등에서 민간의 조직적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민관협치 기능이 작동될 수 있음

• **기본경로 : 행정직영 → 민간위탁 → 민관공동 출연 재단법인**

- 행정직영 형식으로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 중강지원조직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동시에 민간위탁의 전제조건이 되는 당사자협의체 설립과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독립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함
- 민간위탁의 기본방향(위탁시기, 수탁자 선정방법, 지역법인 설립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행정과 민간,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추진해야 함. 이 과정에서 핵심은 수탁법인의 선정방법에 있고, (1) 역량은 부족하지만 지역내 법인 설립을 서두를 것인지, 아니면 (2) 외부 수탁기관을 찾아 2년 정도 인큐베이팅 과

정을 거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임.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지역 내부 역량 진단과 향후 경로에 대해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 선택해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해야 함. 설립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지면 행정 예산으로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면 대략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바람직하기로는 행정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민관협치의 관점을 분명히 하는 것임

3. 참고자료 : 농식품부 및 충남도의 최근 정책 변화

1)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과 전담기구 지정

□ 농식품부 2020 사업지침의 핵심적인 변경사항

- 역량강화 전담기관 지정과 우대 : 시군 내 중간지원조직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조직, 산하기관 등 상시 교육이 가능한 조직이 대상. 전담기관 운영시에 사업비 한도 1억원을 증액 지원함. 대신에 사업의 직접 시행을 강조함(일부 재 위탁, 용역만 인정)
- 인건비 지원 : 30% 지방비 매칭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2인까지 인건비 사용이 가능함(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과목의 유연성 확대)
- 2022년 사업부터는 전담기관 지정·운영 시에만 시군역량강화사업 예산 신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명시함. 또 중심지·기초거점사업의 소프트웨어 역량강화 사업을 전담기관이 추진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예정임을 밝힘

□ 충남도 시군별 예산현황

- 재원 비율 : 국비(균특회계) 70%, 도비 9%, 시군비 21%
- 최고액 시군(국비 기준) : 308백만원(천안, 공주, 예산)
- 최저액 시군(국비 기준) : 154백만원(금산)

□ 시사점

-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사업비로 안정된 재원 확보 가능 : 충남도 지원사업 예산(민간위탁 총 200, 행정직영 총 100백만원. 도비:시군비=5:5)은 최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중심으로 활용해도 무방함(지침 내용)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계속 증대되고 추가 인건비 확보 가능 : 농식품부에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육성과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예정이고, 향후 중심지·기초거점사업과 농촌협약 등과 연계하여 역량강화 전담기구로서 역할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함
- 향후 신활력플러스추진단 설치, 농촌협약지원센터 지정 등과 연계하여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채용인력은 계속 확대되고 민간위탁 전환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

- 행정직영 중간지원조직 상태에서는 추가인력 채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역량 강화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의 직접 추진도 매우 불편함

□ [참고] 농업농촌정책 영역 중간지원조직의 인력 규모 추정

- 일회성의 보조사업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의 민간위탁 사무 방식으로 동시에 추진할 경우 기초자치단체마다 20~30명 규모 예상([그림 7] 참고)

[그림 13] 기초 지자체 농촌정책 영역 중간지원조직 수요와 인력 규모 예상



2) 충남형 마을만들기 공모 사업과 접근 방향 제안

□ 사업개요와 시사점

-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도입배경
 -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에 따라 농식품부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2020년부터 지방이양 사무로 분류하고,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통해 재원도 지방 이양함
 - 충남도는 자치분권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충남형의 마을만들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여 5월부터 약 10회에 걸쳐 공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지침을 확정함

- 충남도 자체 사업지침 작성과정에서 각종 쟁점토론을 통해 시군 행정과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리함
- 다만 2021년 예산 확보과정에서 충남도의 가용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상정하지 못하고 2020년 11월 현재 대체 방안을 계속 검토중인 상황임

• **충남형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신규) : 사업 신청자격**

- 신청 마을은 역량단계별 지원방식(씨앗, 새싹, 꽃, 열매)을 유지하여 신청해야 함 ([그림 8] 참고)

[그림 14]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신규)



- 1단계 사업을 집행한 마을은 자율개발(소규모_2억 이하)과 자율개발(중규모_5억 이하) 중에서 선택하여 2단계 사업 신청이 가능함
- 자율개발(소규모_2억이하) 사업을 완료한 마을은 사업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에 자율개발(중규모_5억 이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종합개발(10억원) 사업은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에 따라 성장한 마을(행정리)이 중심이 되어 단일 마을 자체로, 혹은 인근 2~4개 마을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신청 가능함. 또 면소재지 마을이 배후 마을 다수와 협력하는 사업도 신청할 수 있음

• **사업 예산과 유형별 지원 한도액**

- 지원기준 : 도비 30%, 시군비 70%(자부담 별도)
- 사업기간 : 3년간
- 사업유형별 지원 한도액([표 5] 참고)

[표 7]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유형별 지원한도액과 주요 사업

구 분	자율개발		종합개발
	소규모	중규모	
지원한도액	2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주요 사업	프로그램 사업 중심 소규모 하드웨어 사업	중규모 하드웨어 사업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마을 협력 네트워크 사업 읍면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자율개발 주요사업 포함)

• 지침 작성과정의 주요 특징

- 충남의 기존에 축적된 경험을 반영하여 농식품부 기존 지침 한계를 극복하고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 농식품부 농촌협약 등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유지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예산규모나 방식 등에서 기존의 지침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 때문에 마을만들기 사업의 전면적인 전환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이런 가운데 충남형 사업지침을 작성해야 했다는 한계가 있음
- 하지만 농촌 마을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민관협치의 정책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지침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함

• 사업지침의 주요 특징 : 농식품부 기존 지침과의 비교([표 6] 참고)

- ① 신청자격 확대 : ‘종합개발’에 한하여 1개 행정리만이 아니라 2~4개가 협력하여, 혹은 면소재지 마을과 연계하여 신청 가능
- ② 2억원 소액사업 도입 : 농촌 마을 현실을 고려하여 기존의 자율개발 5억원 사업을 분리하여 2억원 사업을 신설하고 다수의 마을로 사업 기회 확대
- ③ 사무장 인건비 인정 : 2021년 사업에서는 ‘종합개발’에 한정하되,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근 사무장 인건비 사용 인정(1년차부터 집행 가능)
- ④ 중간지원조직 역할 명시 : 14개 시군에 설치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 사전교육과 심사, 사후관리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의무 부여
- ⑤ 기본계획 승인 전에 역량강화사업 시행 인정
-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통합적 수립을 원칙으로 제시
- ⑦ 기타 평가 가점으로 마을 자체 이외에 ‘시군 단위의 마을만들기 정책 시스템 구축 성과’를 평가항목에 반영

[표 8]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특징 : 농식품부 기존 지침과의 비교

구 분	농식품부 기존 지침	충남형 마을만들기	비교(특징)
신청 자격	1개 행정리로 국한 ‘10가구 이상’ 조직만 인정 -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미흡(소액사업) - 해수부 관할 마을 불인정	‘종합개발’은 2~4개 행정리 연계, 읍면네트워크도 가능 ‘5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되 마을협약 강화 -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강화 - 해수부 관할 인정(해안가 제외)	고령화 상황 반영하여 작은 행정리 한계 극복 사전준비단계 강조 현실화
개소당 지원액	5억원(자율), 10억원(종합)으로 소규모 사업 없음	2억원(자율개발_소규모) 신설로 행정리 마을 현실 반영	다수 마을 기회 제공 선행사업 연계 강화
사무장	사무장 활동비 없음	- 사무장 활동비 인정 1년차부터 집행 가능 - 종합개발부터 상근 적용. 자율개발(중규모)은 향후 계속 검토	현장 활동가 중시 농촌 현실 반영
중간지 원조직	컨설팅 기관 의존, 중간지원조직 명시 없음	중간지원조직 역할 명시(사전교육, 심사, 사후관리 등)	충남 경험 확장
역량강 화사업	- 기본계획 승인 후에 집행 - 컨설팅 기관 의존	1년차부터 집행 가능 - 주민조직, 중간지원조직 강조 - 전액 총괄 공기관대행 금지	주민조직 등 ‘기본과 기초’ 중시
계획 수립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분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통합 수립 원칙	사업신청서 강조 주민주도 계획 강화
시설물 건축	- 공기관대행사업 집행(일반) - 경쟁입찰 방식(일반)	- 건축물 디자인 강조 ‘협상 입찰’ 중시	‘좋은 건축’ 강조
부지 확보	- 사전 매입, 지방비 매칭 불인정 - 사업선정 후 부지변경 다수	- 사업신청서 심사 강화 - 사전매입, 지방비 매칭 인정	부지 변경 사례 예방
시설물 위탁	재위탁 금지	전체 면적의 50% 이내 일부 위탁 인정	시설 활성화 유도
사유 시설물	‘10가구 이상, 집단화’된 경우만 인정	‘집단화’ 규정 삭제	현실화
마을 기금	‘보조금의 2~5%’	- 보조금의 1~2% - 마을협약 중시	현실화 사전 협약 강화
평가 방식	서류평가, 대면평가 중시	- 대면평가와 현장평가 병행 - 시군 정책위원회 역할 명시	평가 과정 강조(교육 측면)
시군 평가	별도 없음	- 시군 민관협치 시스템 가점 - 마을만들기협의회 가입 가점	시군 평가도 반영

• 시사점

- 기존의 농식품부 사업지침의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하고, 당진시 마을만들기 중

간지원조직과 협력하여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가 실현될 수 있는 길이 더욱 확장됨

- 향후 2~3년간의 시행 경험을 축적하면서 더욱 현장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사업 지침이 수정될 것으로 기대함
- 다만 2021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의 도비 예산(약 12억원)이 반영되지 못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발생한 상황임

3) 농식품부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 도입 취지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존에’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선순환 경제 육성 등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
 -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지원된 시설이나 사업, 조직 등을 최대한 활용
 - 특정 분야의 테마보다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시스템 구축 중시
- **사업추진의 필수 요소 : ASPP 모델**
 - ① 민간 활동가 및 사업주체(액션그룹)의 집중적인 육성(Actor)
 - ② 농촌정책의 플랫폼 기능을 담당할 민간 중심의 사업추진단 구성(System)
 - ③ 계약 협약(Planning Contract)을 염두에 두고 연계, 협력사업 발굴
 - ④ 지역특화산업,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등을 통한 창의적 사업 추진(Project)
- **사업담당 부서** :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
 - 충남도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마을가꾸기팀
- **사업예산** : 시군당 4년간 총 70억원(국비 49, 지방비 21)
 - 년차 10%, 2~4년차 각 30%
 - 총사업비의 30% ‘이상’은 S/W 사업(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에 사용
- **사업선정**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23개 시군 중에서 총 100개 시군 선정
 - 2021년 사업지구까지 80개 시군 선정 완료
 - 2022년 사업지구로 신규 20개 시군 선정 예정

- 중앙계획지원단 : 시군 선정과 컨설팅, 자문, 기본계획 승인 등 수행

□ 기존 정책 사업과 가른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3대 특징

① 사업내용 : 총사업비의 30% ‘이상’은 S/W사업 예산으로 활용

- 활동가 발굴 → 액션그룹 조직화 → 역량 강화 → 사업의 지속성 확보라는 절차와 원칙 고려
- 하드웨어(H/W) 사업의 경우 기존 시설물과의 연계 및 재활용을 우선 고려
- 지역의 활력제고를 위해 청년층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 우선 선정
- 단위사업(H/W, S/W)의 운영주체는 반드시 명기하고, 공모를 통해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경우, 공모절차, 시기, 방법, 기준 등을 명시

② 액션그룹 발굴과 육성 방법론 : 2단계를 원칙으로 성장과정 중시

- (1단계) 현장 활동가 발굴, 액션그룹 구성 및 연계 네트워킹 유도
 - * 신활력사업의 목표를 정하고 조직 구성과 계획수립, 시행 등 공동체 활동 기본원칙 교육
- (2단계) 액션그룹 제안 반영, S/W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조직적 역량 배양
 - *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유도. 청년층 아이디어를 반영한 조직 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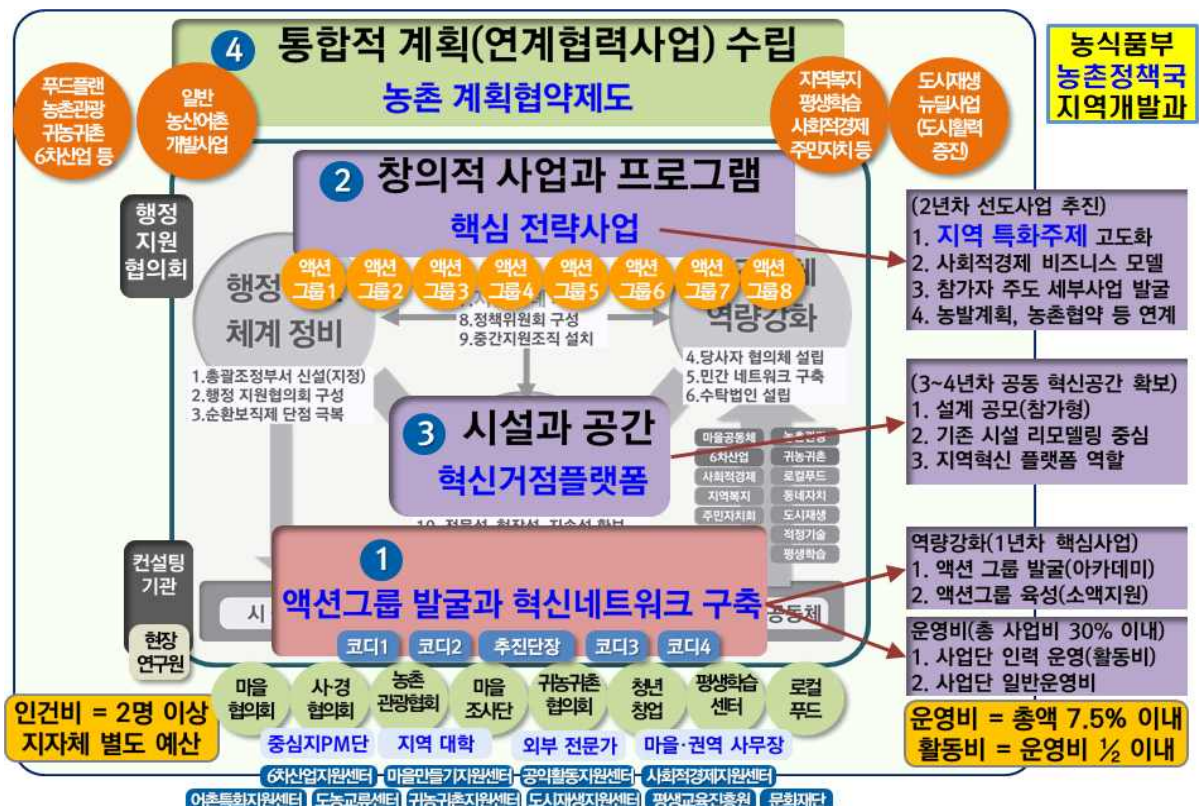
③민관협치 추진체계 구축 : 민간 주도를 원칙으로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 추진위원회 : 최고의사결정기구. 세부계획 승인, 사업비 투자결정, 사무국 직원 채용, 감사 등
- 추진단장: 사업총괄
- 사무국: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 * 사무국장 : 상근 근로, 사업비 집행 등 사무국 총괄
 - * 사무원 : 상근 근로, 사무국장 사무보조
 - * 코디네이터 : 반상근(비상근) 근로, 액션그룹 발굴 및 조정, 지원 등
- 액션그룹: H/W, S/W사업(프로젝트) 실행 주체
- 전담부서: 사업비 교부 및 집행, 지원조례 제정 및 개정, 사무국 지원(인건비 확보 및 직원 파견 등

□ 사업의 성격과 시사점

- **사업 성격** : 기존 농촌개발 정책에 대한 근본적 반성에서 출발
 -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새롭게 등장한 사업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시작했던 ‘신활력사업’의 부활에 해당함
 - 지자체에 최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사업의 기획과 추진방식에 있어서 지자체 주도성을 인정함(적어도 사업 테마)
- **사업 시사점** : 지자체의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시스템 구축
 - 민관협치형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지역혁신의 플랫폼(통합형 중간지원조직) 형성을 목표로 함. 이런 방향성은 충남의 농촌마을정책이 지향해 온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과 동일함([그림 9] 참고)
 - 충남도가 2015년부터 시군별로 추진해 온 ‘농촌마을정책의 민관협치형 시스템 구축’ 성과를 배경으로 출발하여 보다 튼튼한 정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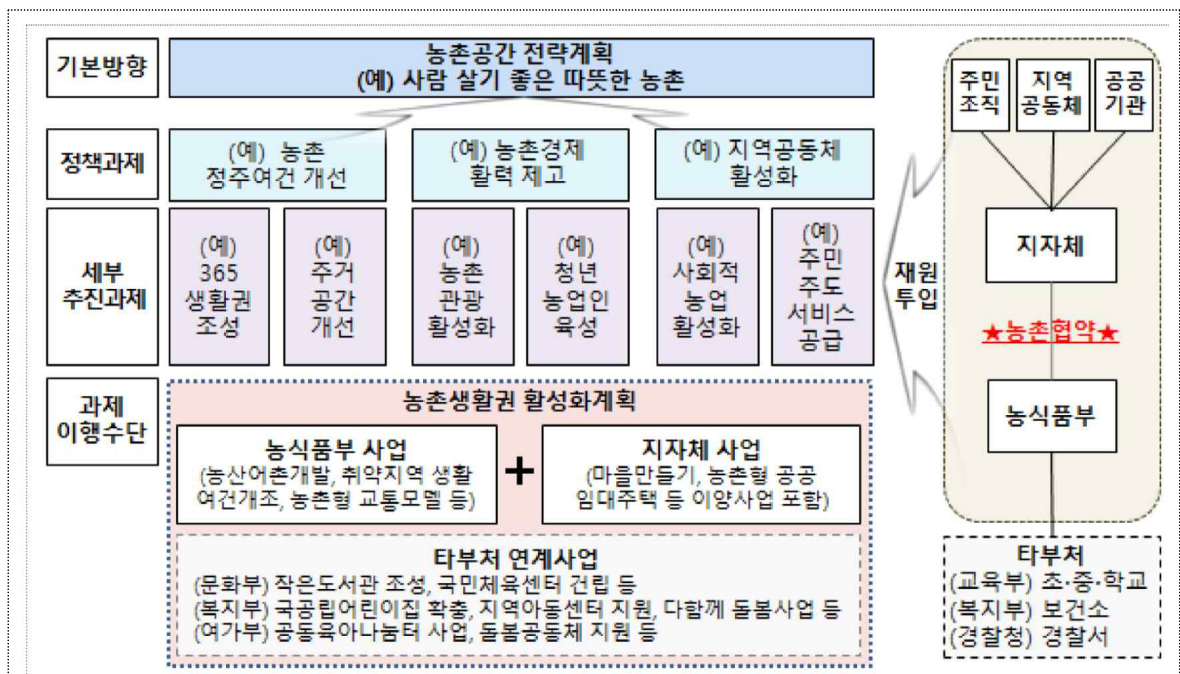
[그림 15] 민관협치형 정책시스템 구축과 신활력플러스 사업과의 관계(개념도)



4) 농촌협약제도의 개요와 시사점

□ 농촌협약 제도의 개요 : [그림 10], [표 7] 참고

- **협약 주체** :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군수가 협약의 직접 당사자에 해당함
 - 지자체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 주체, 공공기관 등 핵심 관계자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음
- **협약 대상** : 복수 사업의 통합 추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 구체적인 협약 대상이 됨
 - 구체적인 세부 사업은 사전에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발계획 등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세부(내역)사업 외에도 지자체 자체사업과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사업 등을 모두 협약의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음
- **협약 기간** : ‘5년을 기본’으로 중대 사유가 있을 경우 조정 가능함
- **협약 규모** : 국비 지원은 최대 300억/개소(+α) + 지방비, 민간투자금 등



[그림 16] 농촌 협약의 기본 개념도(예시)

□ 농촌협약 체결을 위한 3대 ‘전제조건’

- ① 반드시 마을만들기사업을 포함하고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연계

- 기존 농식품부 사업의 내용·기간·방식 등을 동일하게 유지 권장

② 지역의 중장기 계획(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제2기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③ 시·군에 농촌협약 담당 전담조직, 농촌협약위원회, 중간지원조직 설치

- 농촌협약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 운영
- 행정, 민간, 중간지원조직, 공동체 등이 참여하여 농촌협약 위원회 운영
- 농촌협약 이행을 전담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운영 : 중심지활성화,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등 관련 다수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합 운영 시 가점

[표 9]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비교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시간적 범위	20년	5년
공간적 범위	시·군	시·군 내 생활권
기본 개념	시·군의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계획에 따라 국가·지자체·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의 사업들의 통합계획
주요 내용	·시·군 전체의 사회·경제·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 현황 ·생활권별 서비스 공급·접근성 현황 ·시·군 전체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 및 목표 ·각 생활권별 향후 개선 방향	·해당 생활권의 개선·활성화를 위한 비전·목표 및 세부추진과제 ·세부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 추진 예정 사업목록, 소요예산, 재원, 일정 등 제시 ·정책과제별 성과목표 및 관리계획

□ 농식품부 2021년 추진일정(예정)

- 전제조건 : 사업 신청 이전에 위의 3대 전제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함
 - 농촌협약 전담부서, 위원회, 중간지원조직 포함
 -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시·군 중에서 시도지사 추천을 받은 곳
- * 단, 1개소라도 마을만들기 계속지구의 2021년 예산을 미편성했거나, 2021년 신규지구 예산을 미편성한 시·군은 응모 불가
- 신청서류 : 농촌공간 전략계획(예비), 활성화계획(예비), 증빙서류 등
- 협약기간 : 2022~2026, 5개년
- 우대사항, 고려사항

- 읍면 소재지, 배후 마을 등의 빈집 정비를 정책과제에 포함하는 경우 우대
- 농촌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특정 시도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할 예정

• 2021년 추진일정(예정)

- 2021년 추진 공모 : 2021년 1월 알림, 5월 접수 예정
- 응모 시군 평가 : 2021년 5월 ~ 6월
- 선정 결과 발표 : 2021년 6월말

□ 충남 시군의 농촌협약 공모 준비 상황 : [표 8] 참고

- 전국 선정 현황 : 전국 9개 + 예비지구 3개 시군(2020.06. 발표)
 - 홍성군, 임실군, 원주시, 영동군, 순창군, 보성군, 상주시, 김해시, 밀양시
 - * 1차(2019.12.20.~2020.1.17.), 25개소 응모, 2개 시군(홍성, 임실) 선정
 - * 2차(2020.4.17.~6.10.), 19개소 응모, 7개 시군 선정
 - 예비지구 : 이천시, 영월군, 괴산군

[표 10] 충남 시군의 농촌협약 공모 준비 상황(2020.11. 현재)

시군	용역기관	용역금액	계약일시	비고
홍성군	충남연구원	180,000천원	2019.12.~2020.11 .	수의계약
예산군	(주)우리누리	18,662천원	2019.11.~2021.05 .	수의계약
부여군	(주)착한동네	300,000천원	2019.11.~2021.06 .	일반협상에 의한 계약 역량강화사업 370백만원 통합 발주
서천군	지역농업네트워크 충청협동조합	20,240천원	2020.02.~2020.07 .	수의계약 (전략계획 용역비 '21년 예산 반영)
공주시	(주)정앤서	255,000천원	2020.07.~2021.05 .	일반협상에 의한 계약
청양군	(주)지역활성화센터	294,000천원	2020.07.~2021.05 .	가격경쟁입찰 (수의계약)
보령시	(주)정앤서	217,500천원	2020.08.~2021.06 .	일반협상에 의한 계약
금산군	(주)지역활성화센터	270,000천원	2020.09.~2021.06 .	일반협상에 의한 계약
아산시	(충남연구원 우선 검토중)	300,000천원	2021년 발주	
당진시	(충남연구원 우선 검토중)	300,000천원	2021년 발주	
서산시	(충남연구원 우선 검토중)	380,000천원	2021년 발주	

* 주 : 추진 중인 시군은 계약금액 기준이고, 2021년 준비 시군은 본예산 기준

- 충남에서 선정되어 협약 체결을 준비중인 시군 : 홍성군
 - 2020년 11월 현재, 농식품부 주도로 2주 1회 빈도로 자문회의를 진행하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생활권계획 범위 설정 등에 대해 계속 토론 중임
 - 별도로 선정된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국토부)과도 관련하여 조직개편을 통해 농촌정책의 전담 ‘과’ 신설을 검토하였으나 이루지 못한 상태임(2020년 11월 현재)
- 2021년 신규 공모 신청을 추진중인 시군(7) : 예산, 부여, 서천, 공주, 청양, 보령, 금산
 - 예산군 : 2020년도 심사에서 탈락하였지만 준비 정도가 가장 앞선 상태
- 2021년 신규 공모를 위해 본예산에 반영한 시군(3) : 아산, 당진, 서산 등

□ 농촌협약 관련 정책 동향의 시사점

- ‘총론 찬성, 각론 이견’ 상황이 지속중

- 자치분권의 큰 흐름 속에서 균형발전특별법(3장 20조)에 기초한 계획협약 방식은 앞으로 지향해야 할 큰 방향인 것은 분명하고, 이에 맞추어 지자체 정책 시스템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장,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균형발전위원회가 주도하고 국토부가 주관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도 균형발전특별법의 협약 제도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충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홍성군도 추진상황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평가임
- 또 국무조정실(생활SOC추진단) 주도로 균형발전위원회가 협력하여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에서 추진하는 생활SOC복합화 사업도 유사한 관점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고, 사업규모가 계속 확대 중에 있음
- 하지만 이러한 계획협약 방식이 실효성이 있고 타당한 전략인지, 사업을 주도해야 할 지자체의 정책 전문성이 있는지, 민간의 자치역량이 준비되어 있는지 등 여러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어, 농촌협약의 작성지침이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논쟁적인 부분도 많아 1차년도에 선정된 전국 9개 시군에서도 계속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향후 이런 정책 동향을 충분히 파악하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민관협치형 정책 추진체계로의 사전 정비 강조

- 농촌협약은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모지침, 농특위 의결안건([표 1-1] 참고)과 동일하게 사전에 지자체의 ‘민관협치형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 농특위 의결 안건(2019.12.)의 취지도 반영하여 공모 신청 이전에 미리 정비해야 유리한 상황임
- 농촌협약은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한 지자체가 선정에도 유리하고, 선정 이후의 추진과정도 원활할 것으로 기대됨

-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협약의 사후관리가 더 중요

- 농촌협약은 20년에 걸친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추진되는 방식으로 지역계획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요구함
- 생활권계획도 5년 계획에 해당하고 농발계획 등의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세부사업계획까지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상황임

- 이런 관점에서 지자체 내부의 질 높은 정책(계획)관리 역량이 요구되고 있음. 농촌협약 제도가 요구하는 ‘농촌협약지원센터’는 협약 체결 이후의 추진과정까지 염두에 둘 때 필수불가결한 방향으로 인정하고 있음. 사전준비와 추진과정,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포함하여 지자체의 정책(계획)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중간지원조직을 선제적으로 설치하는 등 정책 추진체계 정비는 시급하고도 중요함

□ 지자체 대응방향1 : 높은 경쟁률, 모호한 사업지침, 전략적 접근

• 높은 경쟁률 : 충남에서만 10개 시군이 준비 중

- 농촌협약은 전국의 113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이 신청 대상이고,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보면 매우 과열되는 상황이라고 평가됨.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컨설팅기관은 한정되어 있고, 계획 수립 역량이 의심되는 곳도 많으며, 역량있는 컨설턴트도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사업지침에는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시군 중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곳”이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는 농식품부 평가요소·기준을 고려하여 시군을 추천하는 방식임. 2020년 11월 현재, 충남도에서 2021년 5월에 신청 가능한 시군 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 2020년 11월 현재, 충남도에서 사업 신청을 준비 중인 시군은 당진시를 포함하여 최소 10개 시군이나 되므로 매우 경쟁률이 높은 것은 분명함. 이미 신청하여 탈락한 경험이 있는 예산군이나 농촌마을정책의 민관협치형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한 다른 시군 등은 당진시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접근

- 2020년 1월에 1차로 선정된 홍성군에서도 아직 생활권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세부 사업내용도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임. 농촌협약 중앙계획지원단의 위원들 사이에서도 생활권계획의 개념과 구분 방식 등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많은 상황임. 이러한 정책적 모호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진시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모든 시군 지자체가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민관협치의 농촌정책 시스템 강화’와 ‘민간의 조직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함. 이를 통해 중장기 관점에서 기초 지자체의 민관협치 역량이 강화되고, 공모사업에 탈락했을 경우에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명분과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지자체 대응방향2 : 민관협치의 농촌정책 시스템 강화에 기여

• 행정 전담부서에 중장기 종합계획 관리를 위한 임기제 공무원 채용

- 지자체 내부의 종합적인 정책(계획)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전에 농촌협약이 요구하는 전제조건을 정비해나감. 행정의 농촌협약 전담부서에 이런 권한을 부여하고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특히 도시/농촌계획 전공자를 임기제 공무원(임기제 ‘가’ 급)으로 채용하여 행정의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함. 이런 사전조치를 통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농촌협약 체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지자체 연구소 기능 강화 : 협약관리팀(가칭) 신설 구상

- 현재 제도에서는 기초 지자체에 연구소 설치가 가능하지 않지만 농촌협약 선정 시에는 행정 총괄 ‘과’ 산하에 협약관리팀(가칭)을 신설하는 구상을 제안해야 함. 신설 팀에서 지자체의 농촌협약을 포함하여 중장기 종합계획을 총괄·조정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농촌협약 예비계획서에도 반영하는 것이 유리함
- 현재 각종 연구용역의 외부 발주가 매우 빈번하고, 연구용역 단가가 계속 상승하며, 연구보고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투자 대비 효과는 매우 높다고 판단함
- 지자체 공무원수의 제약(총액인건비) 요건으로 인해 신규 채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중간지원조직에 기능을 부여하여 계획 관리 역량을 축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농촌협약 위원회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의 선제적 준비

- 충남의 시군들은 대체로 농촌협약의 3대 전제조건을 부분적으로 갖춘 상황임. 하지만 민관협치형 정책위원회와 행정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운영한 경험이 부족하여 농촌협약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불안정함
- 앞으로 농촌협약으로 확장될 수 있는 민관협치형 통합형 위원회와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021년 상반기 내에 제도적 정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2021년 5월의 신규 공모 신청 일정에 맞추는 것이 가능할 것임

□ 지자체 대응방향3 : 민간의 조직화와 역량 강화에 기여

• **신활력플러스와 연계하여 농촌협약 민간 당사자의 체계적 육성**

- 현재의 농촌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핵심으로 되어 있지만 향후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함. 특히 행안부 주민자치회를 둘러싼 정책 동향을 고려할 때(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제 연계 등) 행정과 읍면동 주민자치회 사이의 정책협약으로 발전될 것으로 판단됨
- 하드웨어 사업 자체는 행정이 직접 수행하거나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지만 인적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업 집행, 사후관리 등 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내부의 민간 당사자(특히 사회적경제조직)가 매우 중요함. 향후 당진시 내부에서도 행정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주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 당사자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음
- 읍면 단위 주민자치회 역량을 축적하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선정을 통해 민간주체의 발굴과 체계적인 성장과정을 지원해야 함. 이를 통해 농촌협약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선정된 이후에도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임

• **농촌정책의 당사자협의체 및 네트워크 법인 설립은 시급한 과제에 해당**

- 농촌협약의 대상이 되는 세부 사업을 고려할 때 민간주체로는 행정리 단위의 마을들이 모인 마을만들기협의회, 읍면 단위 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추진위원회가 핵심적인 민간 당사자에 해당함
- 여기에 읍면 단위 주민자치회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청년단체, 6차산업인증자모임, 농촌관광 협의체, 귀농귀촌 협의체 등이 결합되는 형태가 될 것임. 또 이들 조직의 임원진이 농촌협약 위원회나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모든 지자체는 농촌협약과 연계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마을만들기협의회와 네트워크 법인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그 성과를 농촌협약 예비계획서에 포함하는 것이 유리함. 이후에 농촌정책 관련 당사자 협의체들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법인화(혹은 역량강화)도 적극 시도함
- 2021년 5월 공모 신청 이전에 이러한 방향성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일정 정도의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장을 의도적으로 확보하고, 행정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에 해당함